

데스크 시국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조선대 집행부와 법인 이사회가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사실 학내 자유에 민감한 대학 구성원들과 법적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이사회가 갈등하는 것은 조선대에서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이사진 퇴진 운동도 있었고 특정 이사 퇴출 집회도 여러 차례였다. 다만 이번에는 총장이 징계 대상이 돼 주목받고 있을 뿐이다. 총장이 이사회 결의로 해임된 적도 있어 이 또한 전례 없는 일은 아니다.

좌시할 수 없는 위기의 증후들

총장을 해임까지 가능한 중징계 대상에 올려놓은 사태의 발단은 '평생교육체 지원사업' 보고서 누락과 교수의 대리 강의 건이다. 공과대학도 교수는 무려 여섯 학기 동안 수업을 강사에게 대신 맡기고 강단에 서지 않았다. 미래사회융합대학 모 교수는 지난해 국제사업인 '평생교육체 지원'과 관련한 중간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을 나흘 앞두고 보직사표를 내고 소속 교수들도 무더기 가세함으로써 조선대는 매년 7억여 원을 지원받았던 해당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와 관련 애초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수 등 당사자를 징계했으나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였던 단과대학장 두 명은 징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반면 이사회는 이들에 대해서도 총장 직권으로 징계안을 올리

조선대, '1.8 항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라고 요구했다. 총장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7월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7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세상의 눈금이 운동 총장 징계에 쏠리고 있지만 문제가 된 징계 건은 결코 예상되지 않다. 도대체 교수가 무려 3년 동안 대리 강사를 내세우고 수업을 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상식 밖이지만 조선대에서는 통했다. 법인 이사회 회의록에는 더 기막힌 사실이 기록돼 있다. 학생들이 이 사실을 2016년 제보했음에도 확인되지 않았고 강의 평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 몇 명 불러 물어보면 드러날 사안이 묻힌 것은 결국,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학교는 물론 교수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해도 부족할 일이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교수가 되려 침해한 치명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위기 경보는 조선대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무용과 교수 등 두 명은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전담 교원' 선발 과정 등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공대 교수는 최근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는 공과대학 교수 아홉 명이 동료 교수 아들의 출석을 조작하고 논문을 통과시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나마 언론을 타고 외부에 알려진 게 이 정도다. 일련의 사건은 학교가 풀어가고 있다는 심각한 시그널이다. 수많은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곳곳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느슨한 인식의 연대가 있다면 조선대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조선대 안팎에서 이사회와 집

행부의 갈등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대 구성원들로서는 억울한 일이나 차기 총장 후보군이 배후에서 법인 이사회와 집행부 갈등을 부각함으로써 입지를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만으로도 선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셈이다. 이런 설이 나온다면 조선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순수한 고민과 열정이 꺾히기 때문이다.

강력한 개혁으로 미래 기약해야

조선대는 민립 대학을 사유화한 구제제를 1988년 1·8 항쟁으로 퇴출하고 혁명을 단행했다. 총장·이사 등 경영진 퇴진과 학내 민주화를 촉구하며 무려 113일 동안 투쟁과 농성을 벌여 학내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조선대는 혁명은커녕 혁신을 거론하기도 민망한 처지에 놓였다. 총장이 바뀌 때마다 혁신과 변화를 표방했지만 실전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 2018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과 함께 신입생 선발 인원이 감축되는 사태를 겪었음에도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충격으로 혁신위원회를 꾸려 개혁안을 담아 백서를 만들었지만 사문화됐다.

개혁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필연적으로 구성원들의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조선대 구성원이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의 미래가 없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투쟁했던 1·8 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한 개혁의 첫걸음을 떼야 할 때가 됐다. 철옹성을 무너뜨린 1·8 항쟁의 정신이 조선대 구성원들의 가슴에 면면히 살아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penfoot@kwangju.co.kr

은펜칼럼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독서의 달을 맞아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자·공연·강연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듯이 최근의 도서관 동향도 많이 달라졌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이 조사한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도서관 서비스는 특히 온라인 서비스 제공 활성화, 팟캐스트 운영, 가상 전시회, 온라인 참고 서비스 제공 등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내도서관들은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일반 도서와 전자책 오디오북을 합한 성인의 평균 독서량은 4.5권으로 그 이전 조사 때 보다 3권이나 줄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도서관 방문 제한을 비롯한 문화 활동 위축 등이 주원인이겠으나 책 배달 서비스, 스마트 도서관 운영, 전자책을 비롯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었고, 한편으로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독서율 하락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값 반환제'를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

인류 문명이 시작된 이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사와 책의 탄생으로 보고 있다. 세상의 기록물인 책이 없는 역사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가 없고 또한 영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생성되고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책이라는 기록물의 탄생으로 본격적인 인류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은 반드시 널리 전적(典籍)을 보아야 한다. 그런 뒤에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효과를 이루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인간은 예부터 독서를 통하여 지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생활상의 필요에 의하여 책을 도구화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 혹은 어떤 문화권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독서의 목적은 조금씩 다르기도 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식과 정보가 기반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계속적인 지식의 습득과 정보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독서는 개인 발전과 사회 개혁의 수단으로 폭넓은 기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 '책은 국력이다'라고 한 시절 크게 외친 적이 있듯이 '독서력은 국력이다'란 말에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크게 반대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국민의 독서율과 독서량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 수준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 독서율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할 때 문화의 질이나 수준은 높아질 것이며 독서력

과 독서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적, 정보적, 정신적 역량과 성숙도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읽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독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독서력이 바탕이 되어야 많은 정보를 해석해 낼 수 있고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골라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취미에 앞서 인간이라면 누구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수적으로 일상화되어야 한다.

요즘 독서 증진과 집체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책값 반환제' 프로젝트다. 원하는 책을 구입한 후 읽은 다음, 일정 기간 안에 돌려주면 책값을 전액 환불해주거나 새 책을 무료로 대출해 주는 방식들이다. 울산광역시, 서울 서초구, 충북 청주시 등이 연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달 초 선착순으로 마감하는데 한 달 예산이 1주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한다. 지역 서점과 도서관이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1석 2조의 정책이다.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책값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년에 책 한 권 읽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마땅히 읽을 책이 없어 읽지 못하는 분들은 책값 반환제 프로젝트를 활용한 독서를 통해 등화가전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어떨까?

기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 대표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으로 여론 조작을 맡았던 괴벨스는 "메시지를 단순하게 해서, 쉽 없이 반복하라. 그러면 삼각형을 원이라고 믿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하필 괴벨스의 말이라 인용하려니 마음이 불편하지만, 반복이 메시지를 강하게 하는 매우 확실한 방법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같은 단어를 여러 차례 반복 사용하면 메시지의 강도가 높아지고 듣는 사람에게 감동과 공감을 갖게 할 수 있다.

기업들도 메시지 반복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같은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계속 내보내는 일이 많다. 커피 브랜드 맥스웰하우스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어요"라는 광고 카피를 1915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나, 아이보리비누가 1891년부터 '물에 뜨는 비누'라는 메시지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제품 파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8월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하면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45번이나 언급했다. 8분 50초의 길지 않은 연설 가운데 이런

'자유'

게 인플레이션을 강조한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더 올려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정치인들도 반복법을 잘 활용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5년 11월 30일 해군사관학교 연설에서 승리(victory)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일은 유명하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벌어지고 있던 이라크전의 전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승리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역설했다. '승리'를 15번이나 강조한 이 연설 이후 여론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던 지지율이 5-6퍼센트 포인트 상승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연설에서 '우리'(we)라는 단어를 60번이나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메시지 전달법을 쓰고 있다. '자유'라는 단어를 특히 많이 쓰고 있다. 출마선언문에서 14번, 취임사에서 30번,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30번을 썼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쓸 때 사용한 것을 빼고 센 것이다.

그런데 '자유' 메시지는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자유가 어떤 시대정신을 담은 것인지 불분명하게 다가온다는 평이 적지 않다. 왜 그럴까? 자유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다. 똑같은 단어라도 누가 말하느냐와 어떤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매우 달라진다.

김남주 시인은 1986년 '자유'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 맘 흘러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이다/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자유와 지금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분명 다르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다르고 왜 중요한지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 미팅에서 "자유는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알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된지도 모를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라는 단어가 많은 이들에게 의도하는 공감을 선사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칫 '자유'의 반복 사용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평소에도 반복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대해 영국 B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존 헵프리는 '할 말을 잃다'(Lost for Words)라는 저서에서 "자유, 진실, 민주주의 등의 단어가 가지는 어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총알을 쏟아내듯 이런 단어를 남발하고 있으며,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면서 고귀한 단어를 '죽은 단어'로 만들고 말았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자유' 또한 국민에게 가치 있고 공감 가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社說

'기부'라던 한전공대 부지 사실상 '거래'였다

부영주택의 한전공대 부지 기부 과정에 서 체결된 전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 간 협약서와 약정서가 공개됐다. 특히 시비를 뒷받침할 이면 합의서는 없었지만 협약서 내용 가운데 '용도지역 변경 적극 지원' 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상 땅 기부에 따른 대가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한전공대 유치 협약서와 부지 증여 약정서를 공개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된 해당 문건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예정 부지로 나주에 있는 골프장 일부를 무상 기부하고 잔여 부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019년 1월 작성된 협약서는 네 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75만 2000㎡ 중 40만㎡를 대학 부지로 무상 증여하고,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 부지로 확정된 후인 같은 해 8월 서명한 약정서는 대학 부지 경계와 증

여 대상을 확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 사항 등 협약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

문제는 골프장 잔여 부지 35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부영 측은 용도 변경된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5300여 가구를 최고 28층, 용적률 179.94%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는 기존 혁신도시 아파트에 적용된 평균 최고 층수(25층)와 용적률(175%)을 모두 초과한 것이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순수 기부를 빙자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한 부당 거래"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다. 따라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향후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적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특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아울러 학교·공원·도로 및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 기여를 최대한 확보해 개발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을 꾀해야 할 것이다.

광주 U대회 소송 마무리...레거시 사업 속도 내야

2015년 7월 광주에서 열렸던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자 소송이 7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화정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에 지급해야 할 선수촌 사용료는 83억 원(이자 포함 88억 9000만 원) 규모다.

이번 판결에 따라 광주시는 U대회 개최와 운영에 사용되고 남은 잔여 재산 421억 원(이자 28억 원 포함)의 분배 작업과 함께 U대회 조직위 청산 절차에 나선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입 기여율(국비 비율 33%)에 따라 잔여 재산을 배분하게 된다.

지역 스포츠계의 관심은 이제 세계 대학생들의 국제 스포츠 축제였던 U대회 '레거시(유산) 사업'에 쏠리고 있다. 2013년

당시 광주 U대회 조직위는 대회 개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회 수익금을 활용, '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주요 사업은 '반(反)도핑 교육 교재 개발'과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등이다.

한데 지난 7년여 동안 광주시와 조합 간 소송으로 U대회 레거시 사업안은 표류를 거듭했다. 대회 폐막 이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도 검토됐으나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지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기 표류 중인 U대회 레거시 사업에 대해 폭넓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지역 스포츠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광주 U대회의 성과를 되살려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스포츠 꿈나무들을 발굴·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민 간식'으로 통하던 초코파이 가격이 9년 만에 오른다. 주요 원재료 가격 인상 탓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식품업계가 라면·과자값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 9년 동안 가격 동결을 고집해 왔던 오리온 초코파이도 이를 피해 가지는 못한 셈이다. 초코파이는 두 개의 원형 비스킷을 마시멜로로 접착시킨 후, 그 표면에 초콜릿을 씌운 행식의 과자다. 1974년 4월에 동양제과(현 오리온)에서 처음 출시된 초코파이는 남녀노소 할 것없이 큰 인기를 끌

면서 국내 최고 간식으로 꼽혔다. 이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들도 잇따라 초코파이를 출시하면서 한때 상표 등록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오리온 초코파이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간식

이런 '국민 간식'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세계인의 간식'이 되어가고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연 매출이 5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판매량만 약 34억 개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일컬어 세우면 지구 다섯 바퀴를 훌쩍 넘는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를 건너며 정을 전달했고,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친구들 생일 때 케이크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적은 비용으로 작은 정을 나눴던 '국민 간식' 초코파이가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 가격이 인상됐다. 오리온 측은 향후 원부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포장된 제품량을 늘리거나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정'을 놓치지 않아 다행이다. 초코파이가 다시 '착한 가격'으로 돌아와 마음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영원한 '국민 간식'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